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포스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6개소를 지정하였다. 대인·산수·무등 시장 등 전통시장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2개 지역도 새롭게 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어 자치구별로 여건에 맞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과 함께 다양한 재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화로 낙후된 지역 500곳을 선정해 5년간 50조 원을 들여 탈바꿈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주력한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백 수천억 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프로젝트나 일본 도쿄의 마루노우치 지구 재생 사업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도시재생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듯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반복 중이다. 우리나라 특히 광주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도시재생은 국토부의 말처럼 건물 신축 정비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을 거지면서 급격하게 사회적 통합이 와해

되는 현상을 겪었다. 기존 지역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낮고 커뮤니티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이나 재생의 대상이 없어지거나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아 왔다. 이렇듯 재생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커뮤니티 재생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도시재생에서 소프트 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특히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 주고 말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떤 콘텐츠로 채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커뮤니티센터나 지원센터와 같은 공공시설 운영비를 재생 사업이 끝난 후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3년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 사례도 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공공시설을 정부가 확충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마치즈쿠리 사업을 하면서 공공의 지원을 중단하자 90% 이상의 사업 대상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들의 자체 운영 노력이 없다 보니 점차 적자가 누적되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커뮤니티마저 와해되는 부작용을 겪

고 있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역시 그런 전철을 밟아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공공 지원이 중단됐을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기존의 재생 사업이 끝난 지역에 국토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다양한 재생 관련 사업들을 민관이 함께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지역의 젊은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광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나 재생의 첨병인 활동가와 같은 인적 자산과 역사 문화의 물질 자산을 활용하고 지역이나 마을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서 유의미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지역사회가 힘을 합친다면 도시재생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그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례가 우리 광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드는 성공 사례가 곧 광주에서 창출되기를 기원한다.

기고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걸어가야 할 길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쓰고 있다. 그리고 시대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국내외 비정부 기구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각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유엔이 하지만 유엔도 못하는 것을 적십자가 한다”며 유엔은 불편부당성에 대해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적십자는 어떤 경우에도 중립을 지키며 인류의 인도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회고했다.

오늘도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쟁, 분쟁, 재난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다. 위험 지역에서 일하는 만큼 희생 또한 적지 않다. 2003년 8월 19일 이라크 바그다드 유엔 본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민간인이 다쳤다. 유엔은 2008년부터 매년 8월 19일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제정하여 이들을 기리고 있다.

인도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극한 상황은 전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국제인도법이라는 위대한 인도주의 유산이 탄생한 곳도 전쟁터다.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에서 벌어

진 전투의 참상을 목격한 적십자 창시자 앙리 뒤낭은 전쟁 중에도 부상자를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제안하였다. 그의 제안으로 1864년 8월 22일 최초의 제네바협약이 만들어졌고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적십자를 만들어 실천했다. 이후 1949년 8월 12일에는 최초의 국제인도법인 제네바 4개 협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도 1903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에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하였으나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 체결로 폐사되었다. 이후 1919년 8월 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적십자회를 재설립했다. 적십자는 독립된 자주국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회는 독립군 부상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를 양성하고 국내외에서 모금하여 독립군 가족과 부상자, 이산가족 지원 등 고통 받는 이웃의 곁을 지켰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한적십자회 재조직 100주년의 해이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한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수년에 걸쳐 수십 년에 걸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 중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부상자와 전쟁 포로 그리고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었으나 이들 지역에서 국제인도법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지난 2017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물자를 운송하던 국제적십자위원회 직원 6명이 테러 공격으로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기도 했다. 지난 8월 11일 제네바협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무력 충돌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주의는 인간애, 인류애의 정적인 의미를 넘어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고 도우려는 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사랑, 화해, 평화, 봉사, 비폭력, 공동체 정신이 융화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 해결과 치유를 넘어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지속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은 인도주의 운동이다.

어느 한 젊은이의 죽음에 부쳐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뒤늦게 뉴스를 보고서야 사고 소식을 알게 되었다. 지나다니며 교대생들을 보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더욱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피해자는 학교에서도 절친으로 소문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두 청년은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피했고, 이 짧은 순간에 두 청년의 운명이 갈렸다. 한 친구는 살았고, 다른 한 친구는 꿈을 채 파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은 외동아들이라 하고 있다. 졸지에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못하겠다. 살아남은 친구는 자기 대신 친구가 죽었다는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에서 괴성을 지르는 등 괴로워하고 있다고 한다. 살아남았지만 이 사고의 기억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청년의 고통도 상상하지 못하겠다.

절친이었던 두 친구는 새벽 늦게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본다. 앞으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든지, 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

만나 결혼할 것인지 등등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밤 늦게까지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

사고 차량 운전자는 제약회사 신입 사원이라고 한다. 그 역시 동료, 후배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을 것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9%였다고 한다.

처음 출발할 때는 두 명의 동료가 함께 탔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운전자는 18.7km를 운전했다. 운전자는 두 명의 동료들을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를 낸 것 같다. 차에 탔던 동료들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역시 음주 운전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막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와 그 차에 탄 동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본다. 왜 술에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까? 대리 운전을 불렀지만 대리 운전이 잘 잡히지 않았던 것일까? 음주

운전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차에 탄 동료들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뭘 벌일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취업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안에서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한다. 이 일로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

사람이니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못과 실수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음주 운전이 바로 그러한 잘못이다. 음주 운전이 불러올 결과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조그마한 이로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창 좋은 때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 가엾은 청년과 상상하기 어려운 슬픔에 빠져 있을 그의 부모, 친구를 잃고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 전과자가 된 운전자 등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음주 운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음주 운전이 없어야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청년의 명복을 빈다.

社說

광주학생독립운동 위상 재정립 절실하다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역사적 위상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지거나 부정확하게 서술되고 있는가 하면 유공자 숫자도 실제 참가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민족 차별의 식민지 교육에 반대한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전국은 물론 해외까지 뻗어나간 학생 주도의 항일 시위였다. 3·1 운동과 6·10 만세운동과 더불어 3대 항일운동으로 꼽히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 초등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실리지 못하고 있다. 중등 역사교과서 역시 조선총독부 자료를 인용해 194개 학교가 참가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06년 학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내외 320개 학교가 참여했던 것으로 판명됐

다. 신속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 운동 계열 독립유공자는 지난해 436명에서 올해 521명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유공자 기준을 ‘퇴학·제적’까지 넓힌 덕분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5만 4000여 명이 참가해 1600명이 넘게 검거됐고 2900여 명이 퇴학·무기징학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면 유공자 지정 숫자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학적부가 남아 있는 학교와 55개에 그치는 등 자료가 부족한 탓이다.

학생독립운동은 한동안 정확한 실태 파악과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송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제대로 이어 가기 위해서는 역사 자료 정비와 치밀한 연구를 통해 전국 규모의 운동으로서 역사적 위상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과서에 서술 비중을 늘리고 체계적인 선양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덧 10주기 다시 김대중을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신 지 어느덧 10년이나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인지라 더욱 그리운 이름 ‘김대중’을 조용히 불러본다. 추모에 나선 여야 정치권도 오랜만에 모두 한목소리를 내니 보기에 좋다.

어제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결국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고 고인의 업적을 평가했다. 문화상 국회의장도 “오늘의 우리 현실을 감안한 듯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처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의 해빙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며 고인의 해안을 기렸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어제 신안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서는 추모식이 열렸으며 광주에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

모식과 소설가 황석영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홀에서는 ‘하! 김대중, 그의 삶과 사상’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 대회에서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 자유대 명예교수는 “세계는 이미 김대중을 20세기의 거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이 아시아의 가치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김대중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게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마지막 일기에서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고 주어진 생을 한 점 남김없이 태어난 김대중. 그는 우리 곁에 지금 없지만 우리는 그의 열의를 받들어 당당하게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드높이 과시할 만한 휘황한 깃발이 아니었다. 쫓기고 쫓겨나고 물에서 물에서 이리저리 피난하며 가까스로 지켜온 찌꺼기 깃발이었다. 누더기였다. 하지만 그러하기에 더욱 내릴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투쟁의 상징이었다.” 김별아의 소설 ‘백범, 거대한 슬픔’은 위대한 인간이 운명처럼 맞서야 했던 역사적 행간에 숨겨진 기록이다. 임시정부 수석인 백범이 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 지나는

원들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낸다.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194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했으며 5·18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은 “광복절이 진일 청산, 과거사 청산에만 매진하는 과거 지향적인 행사로 전락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듯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이들의 언동은 ‘천일파에 역사적 해 비행기에 올라 지나는

아! 백범 김구

주 내용이다. 생과 사의 틈바구니에 서 여덟 개의 이름을 바꿔 가며 살아야 했던 백범. 작가는 아내의 죽음, 수감 생활과 도피 그리고 이봉창·윤봉길과의 동지애 등 운명처럼 맞서야 했던 고독과 슬픔에 초점을 맞춘다. 거기에는 “나라를 잃고 삼강이 깨져버린 때 돌아야 했던 오래전 우리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올해는 백범 서거 70주년이 되는 해. 김서 여덟 개의 이름을 바꿔 가며 살아야 했던 백범. 작가는 아내의 죽음, 수감 생활과 도피 그리고 이봉창·윤봉길과의 동지애 등 운명처럼 맞서야 했던 고독과 슬픔에 초점을 맞춘다. 거기에는 “나라를 잃고 삼강이 깨져버린 때 돌아야 했던 오래전 우리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일부 야당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